

日刊紙를 통해 본 住居環境問題의 研究(Ⅱ)

- 분노에서 변소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through the Daily newspapers(II)

-Centering around a excretion and fixing process of lavatory-

신 경 주*
Sin, Kyung Joo
이 영 심**
Lee, Young Shim

Abstract

We discussed the change of housing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early 1900s to the present in Study(I).

This study(II) which secondly research of study(I) analyzed the fixing process of a lavatory centering around a excretion which was a serious housing environmental problem in 1920 to 1940.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Articles of content analysis(N=185) were published in 1920 to 1990 which were The Dong-A daily news article about a excretion and a lavatory.

The main content of this syudy was examined the change, such as the number of whole article, the column number of article by time series, and the content of article by subject.

1. The number of whole article by time series was collected mainly in 1920s-1930s. In 1940s-1960s, one-two column of article was appeared generally, and three-four, five column of article was appeared in 1970-1980.

2. Contents of article was divided into two classes, excretion and lavatory. Contents of excretion was 1) a use of fertilizer 2) the method of transportation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3) a cost of gathering 4) a place of disposal 5) the problem of cleaning. Contents of lavatory was 1) a public lavatory 2) a flush toilet 3) a sanitary conditions

3. 1) A use of fertilizer was concentrated in 1920s-1930s, and problems of it was solved more or less by change of management method. Transportation of excretion developed such as 「Gue」->a coach of tank style->underground transportation->a dung car of absorption style. Disposal place of excretion was a cause of dissatisfaction in 1920s and it is serious problem Today. A duty of excretion gathering was transfered to a private worker in 1978. The accumulation problem of excretion was continued until 1940s-1950s. The management law of waste matters was proclaimed in 1986.

2) A public lavatory was planned in 1924 for the first time, and it is insufficient in these days. A settlement of public lavatory in building which has upward of 20pyung became obligation in 1973. The problem of water contamination which by poor septic tank was happened in 1970s-1980s.

I. 序 論

국제연합은 인간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1972년스톡홀름에서 국제연합 환경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130여개국에서 150여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7개조에 걸친 인간환경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인류의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후 20년이 경과한 오늘날 지난 9월 3일-11일에 리우데자네이로 에서 개최된 리우 환경회의에는 세계 185개국에서 3만여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환경문제가 지구인 모두의 관심임을 입증하였다. 과거의 환경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였으나 이제는 지구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고정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속에서 우리나라가 주거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근자의 일로서 1960년대에 들어서 공업화 정책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한 후의 일이다. 그 후 지난 1980년에 환경청이 신설되

었으며, 10년후인 1990년에는 환경처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주거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주거환경문제의 양상이 지금과 달랐고, 주거환경공해가 거론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거환경문제의 변화추이를 고찰하였다(연구(I), 한국주거학회지 제2권 2호)

이의 계속인 본 연구(연구II)에서는 연구(I)의 시대구분에서 初步的 問題期에 속했던 1920년대-1940년대에 우리나라 주거환경문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분노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변소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II. 研究 方法

연구방법은 자료분석 방법을 선택하였고, 분

석자료는 1920년(창간호)-1990년 사이의 동아일보 기사중 분뇨및 변소 관련기사 185개를 사용하였다.

동아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본 신문이 현재 까지 거의 70년간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부수면에서 4대 일간지로 꼽히고, 약 40년간의 기사색인집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분석내용은, 연도별 총 기사수및 기사단수의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시대별 기사내용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및 해석

1. 연도별 총 기사수의 변화추이

연도별 기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표1), 분뇨및 변소 관련기사는 1920-1928년까지 꾸준히 나타나다가, 1929-1931년 까지는 기사가 없었다. 다시, 1932년부터 증가하여 1939년까지 계속되다가, 동아일보 정간시기인 1941-1944년을 거쳐 1951년까지 계속 미미하게 연결되었다. 1953년부터 다소 증가를 보이며, 1962년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20년대에 평균 5.3건, 1930년대에 평균 8.8건으로, 1920년대-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분뇨및 변소 관련기사가 수집되었으며, 그 이후는 낮은 율을 보였다. 그것은, 1920-1930년대의 시기에 분뇨를 이용한 비료생산에 관한 이권다툼과 분뇨의 청소문제에 관한 기사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연도별 기사단수의 변화

연도별 기사단수의 변화추이를 10년단위로 살펴본 결과(표II), 1920년대에는 1-2단 기사가 52개, 3-4단기사가1개로, 1-2단 기사가 9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에는 1-2단 기

사가 47개(54%), 3-4단 기사가 40개(46%)로 3-4단 기사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까지도 1-2단 기사가 중심이 되어 나타났으나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3-4단 기사가 많아지면서 5단기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기사내용의 분석

기사의 내용은 크게 분뇨와 변소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뇨는 다시 내용을 중심으로 i)분뇨의 비료이용문제 ii)분뇨운반방법 iii)분뇨처리장 iv)분뇨수거경비 v)분뇨청소문제 의 5부분으로 분류가 가능하였고, 변소의 내용은 i)공동변소 ii)수세식 변소 iii)변소의 위생문제 의 3부분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1) 분뇨의 경우

(i)비료이용문제

분뇨의 비료이용에 관한 기사는 주로 1920-1930년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20년대에는 비료로 이용하기 위한 분뇨의 공급방법과 그 경매가격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된 시기였다.

1921년 10.2 「분뇨가 또 문제」 기사에서는 부산 부청에서 분뇨를 일정한 사람에게 입찰을 함에 따라 농민들은 분뇨의 구입에 있어 2중의 부담을 지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뇨처분 문제는 1920년대 후반에까지 계속되어 1927년 1.10 「분뇨쟁탈 -더러운 쟁탈전-」에서는 경성부내의 분뇨처분의 이권을 둘러싼 압투를 설명하고 있고, 1927년 2.26 「경매장에 혈전-십수명이 사람을 쳐서 야단-」의 기사에서는 평양부청의 분뇨차압문제로서 분뇨를 둘러싼 이권다툼이 점점 더 심각해져감을 알 수 있었다.

1933년 3.6 「분뇨盜去」는, 농사철에 근교농촌으로부터 우마차를 끌고와 부내의 분뇨를 훔쳐감으로 인해 거리가 오염되므로 이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로 미루어 볼 때 분뇨급취 문제는 1930년대에까지도 계속되었음

<표1> 분뇨 변소 관련기사의 연도별 기사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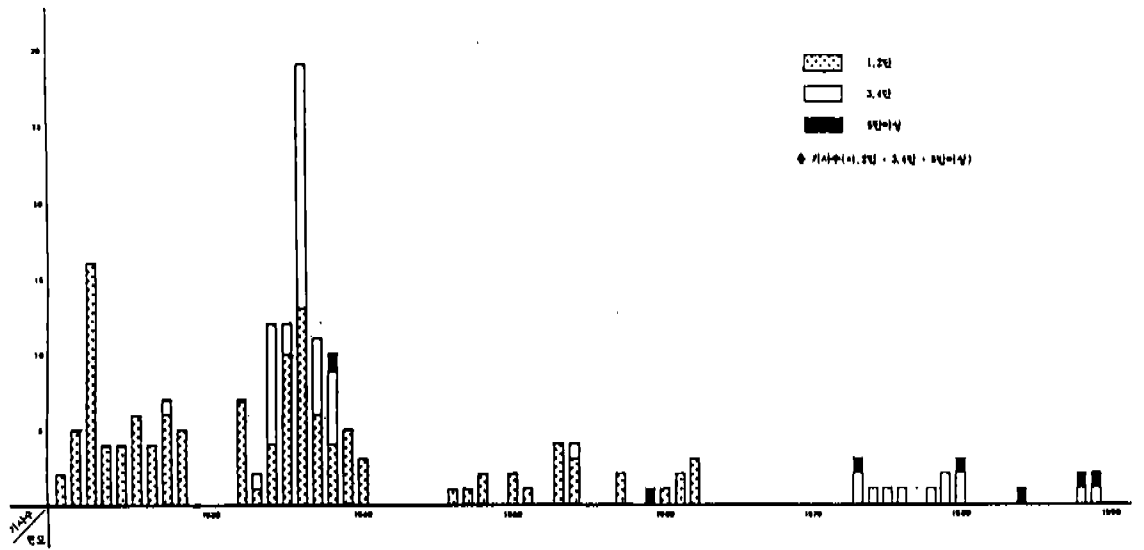
	연 도 별		10 년 단 위	
	분뇨	변소	분뇨	변소
1920	2		47 (4.7)	6 (0.6)
21	5			
22	12	4		
23	3	1		
24	3	1		
25	6			
26	4			
27	7			
28	5			
29				
1930			75 (7.5)	13 (1.3)
31				
32	6	1		
33	2			
34	12			
35	10	2		
36	28	1		
37	9	2		
38	5	5		
39	3	2		
1940	3		6 (0.6)	1 (0.1)
41				
42				
43				
44				
45				
46	1			
47	1			
48	1	1		
49				
1950	1	1		
51	1			
52				
53	2	2		
54	3	1		

55			9 (0.9)	5 (0.5)
56				
57	2			
58				
59		1	6 (0.6)	0 (0)
1960	1			
61	2			
62	3			
63				
64				
65				
66				
67				
58				
69			4 (0.4)	5 (0.5)
1970				
71				
72				
73		3		
74	1			
75	1			
76		1		
77				
78	1			
78	1	1	2 (0.2)	6 (0.6)
1980		3		
81				
82				
83		1		
84				
85				
86				
87		2		
88	2			
89				
1990			149	36
합 계				

<표2> 분뇨 변소 관련기사 단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연 도 별			10 년 단 원		
	1.2	3.4	5이상	1.2	3.4	5이상
1920	2			52 (5.2)	1 (0.1)	0 (0)
21	5					
22	16					
23	4					
24	4					
25	6					
26	4					
27	6	1				
28	5					
29						
1930				47 (4.7)	40 (4.0)	1 (0.1)
31						
32	7					
33	1	1				
34	4	8				
35	10	2				
36	13	16				
37	6	5				
38	4	5	1			
39	2	3				
1940	2	1		6 (0.6)	1 (0.1)	0 (0)
41						
42						
43						
44						
45						
46	1					
47	1					
48	2					
49						
1950	2			2	1	0
51	1					
52						
53	4					
54	3	1				

55				12 (1.2)	1 (0.1)	1 (0.1)
56						
57	2					
58						
59			1	5 (0.5)	1 (0.1)	0 (0)
1960		1				
61	2					
62	3					
63						
64						
65						
66						
67						
68						
69						
1970				0 (0)	8 (0.8)	1 (0.0)
71						
72						
73		2	1			
74		1				
75		1				
76		1				
77						
78		1				
79		2				
1980		2	1	1 (0.1)	3 (0.3)	4 (0.4)
81						
82						
83			1			
84						
85						
86						
87	1		1			
88		1	1			
89						
1990				185		
합계						



<그림1> 분뇨·변소 관련 총 기사수 및 기사 단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을 알 수 있었다.

1934년 5.11 「분뇨처분문제 재연」에서는 경성부 회의에서 분뇨처분문제에 대하여, ① 중대인 제도를 철폐하여 수용자의 부담을 감소할 것, ② 일정한 개인에게 분뇨를 주지 말고 자유 급취를 허가할 것, ③ 마차임금을 인하할 것 등의 요구조건이 제시되었다.

1935년 4.11 「회령분뇨문제, 원만히 해결」에서는 회령의 분뇨공급이 읍직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1936년 2.18 「남분뇨급취, 지명입찰제-시민의 불평도 다소 완화-」에서는 남양읍에서 분뇨급취를 종래의 위임경영 방법을 파기하고 지명입찰제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분뇨공급 문제는 私인 관리방식에서 公인 것으로 변경되면서 어느정도 원만하게 해결되어 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1923년 11.29일자 신문에는「일일 일천육백석의 대소변을 실어갈 수 있게 한다고-경성부의 꿈과 같은 계획」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경성부 위생계에서 쓰레기를 연료에 사용하여 광대한 목욕장을 건설하고, 대소변으로 비료를 만들어 여의도에 대농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위의 기사로 미

루어 1920년대에도 오물이용에 관한 연구가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1962년 8.28「오물수거 대행계약 해약」기사에서는 서울시가 분뇨의 화학적 처리를 위한 유기비료공장 건립을 조건으로, 비료주식회사들에게 분뇨수거 대행업 계약을 체결해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ii) 분뇨 운반방법

분뇨운반방법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1921년 11.12 「문제의 분뇨소제」에서 하수도 설비가 없는 시가의 분뇨운반을 위해 분뇨통을 감출수 있는 큰 계를 고안하던 단계에서, 1924년 1.22 「대소변 운반에 탱크식 마차사용」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종래의 거름마차의 결점을 보완한 「탱크」식 마차를 계획하게 되었다.

1925년 7.9「지하관으로 분뇨배출-시외 아현리에서 마포까지 분뇨를 토관으로 운반하게 해-」기사와 1937년 9.5 「분뇨지하 수송시설-돈암재와 무학재를 넘어서-」의 기사에서는, 분뇨의 지하수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4.14「분뇨처분에 새 방안」에서는, 분뇨수거를 위해 시외로부터 들어오는 우마차 사

용을 일제 금지하게 되는데, 이는 분뇨운반으로 인해 길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1961년에 흡인식 분뇨차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그러나 1975년의 서울시의 분뇨수거율은 기계시설의 미비로 인해 77%선에 머물고 있어, 변두리나 높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민간수거업자에게 돈을 주고 변소를 치우거나, 외진곳에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분뇨 처리장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물처리장소의 문제는 1920년대부터 이미 문제시 되어온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1920년대-1930년대의 기사는 주로 주택가 부근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주된 내용으로, 1922년 왕십리 주민들의 분뇨처리장 이전에 관한 진정은, 1926년「마포일대 주민의 분뇨탱크 설치 반대」, 1928년「원산 분뇨문제로 인한 와우리 주민대회」, 1939년「주택가 분뇨사태로 동부 경성주민들의 농성」으로 이어졌다.

1960년 10.14「시민보건 좀먹는 ‘분뇨탱크’ 주택지대 한복판에 방치」기사에서는, 왜정시대에 설치된 분뇨‘탱크’가 일반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인근 서강, 밤섬 주민들의 보건에 큰 위협이 되므로 신수동 주민들이 이 분뇨‘탱크’를 교외로 옮겨줄것을 진정하고 있었다.

또, 1988년에는 16년동안 서울 서부지역의 수거식 분뇨를 저장, 화학처리해 온 마포구 성산동 서부 분뇨처리장을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1989년에 폐쇄하기로 계획되었다. 서부 분뇨처리장은 저장된 분뇨에 고온고압을 가해 유해독소를 산화시켜 50m높이의 굴뚝을 통해 배출한 뒤 탈수, 탈취하고 남은 고체덩어리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 매립하고 오수는 난지 하수처리장을 통해 한강으로 방류하는 형식으로 분뇨를 처리해왔는데, 이러한 완벽한 화학처리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악취가 풍겨 인근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온 것이다. 서부 분뇨처리장이 폐쇄된 후에는 분뇨처리 업무를 기존

의 中浪川변 동부처리장과 京畿道 高陽군의 북부처리장에서 나누어 맡게 된다.

오늘날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오물처리장소 선정의 문제는, 1936년 7. 1「늘어가느니 오물뿐! 부당국도 처치에 두통-」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분뇨처리장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의 장소물색에 고심했던 이래, 현재까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IV) 분뇨 수거경비

1930년대에 분뇨급취료를 둘러싼 일반부민과 당국간의 대립이 그 중심내용이었다.

1932년 7.28「분뇨료 징수-매호에 연 총 1원 30전-」기사는 분뇨료 징수는 분뇨 중간상인에게만 이익을 줄 뿐으로, 농민뿐 아니라 일반 부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하여, 부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나, 1935년 6월부터 경성부의 분뇨급취 수수료가 징수되었다. 그 부과방법은, 호별세 등급에 따라 5십4등까지는 매월 20전, 5십4등부터 60등까지는 매월 15전, 6십1등 이하는 매월 10전이었는데, 부과될 호수는 5십4등까지가 약 7천호, 5십5등부터 6십등까지가 약 8천호, 6십1등 이하가 약 2만호로, 징수될 수수료 총액은 매월 5천원 내지 6천원에 달할 것으로 보였다.

1947년에는 서울시의 오물세가 개정되었다. 1등부터 10등까지로 하고, 1등은 호별세 90. 2등이상은 연 1천 7원으로, 10등이하는 연 1백 30원으로 하였다.

1978 8.30「분뇨수거 민영화」기사에서는 성동구와 동대문구 전역의 분뇨수거업무가 구청으로부터 민간업자에게 이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청소원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수거업무에 대한 적자폭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79년에 성동구의 주민 여론조사결과 민간 수거업자들의 영수증 미발급, 고지대 수거기피 행위, 부당요금 징수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분뇨 청소문제

분뇨의 청소에 관한 기사는 1930년대에 가장 기사수가 많았으며, 그 주된 내용은 변소청소가 제대로 되지않아 오물이 적체됨에 따른 심

각한 보건위생문제였다.

1935년에는 총독부 위생과에서 부령으로서 '도시오물 청소령'을 제정하는데, 이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분뇨를 둘러싼 이권쟁탈의 분규를 없애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10.25「청소령 실시이후 -종전보다 오히려 더 태만하다」기사에서는, 합흥부 당국의 경우, 종래보다 확충된 시설로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종전보다 태만하여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물적체의 주원인은, 부당국(위생계)의 태만함, 청소시설과 청소인부수의 부족, 청부제 오물청소에 따른 폐단 등으로 집약할 수 있었다.

1939년에는 인천지역의 오물청소를 부직영으로 계획하기도 하나, 오물적체 문제는 1940년대-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948년 10.12「세종로에 오줌바다. 오물청소는 누가?」라는 기사는 공중변소에서 오물의 넘침이 서울의 중심적인 거리에서까지도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 당시의 분뇨청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게하여 준다.

오물청소법이 1986년 12월 31일에 폐지되고 1986년 12월 31일 폐기물 관리법이 공포된다. 따라서 법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는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분뇨정화조'라 함은, 분뇨를 침전(沈澱), 분해(分解)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규 해설집 1989』

2) 변소의 경우

i) 공동변소

1932년 7.22「변소의 강제설치」기사에서는 일제시대 종로서에서 관내의 변소없는 집을 조사하여 변소설치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38년까지도 변소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38년 11.6「변소기근의 대경성」기사는, 경성부내에 공동변소가 적어서 변소를 가고자하는 사람들이 찻집이나 백화점을 찾는 진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당시의 공동변소 부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1935년-1939년까지 경성 인천, 원산, 장항, 춘천, 청주등지에 있어 공중변소의 부족함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1924년 5월에 인천지역에 공동변소의 신설계획이 처음으로 세워진 이래,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공동변소의 신설, 혹은 증설계획이 세워졌다.

1953년 9.19「전국에 오백개소 공중변소를 신설」기사에는, 보건부에서 서울시내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총 오백개소의 공동변소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목재 시멘트등을 유엔 OAO로부터 원조를 얻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1959년 3.10「화장실의 거울」이라는 기사에서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사에는 거울을 다는 위치와 높이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의 실내장식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1980년 5.16「도심공중변소가 적다」기사에서는 서울시가 막대한 자원을 들여 도시 근대화 작업을 벌이면서도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지 공중변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거의 만들지 않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각 지하철역에 공중변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80년 당시 서울시내에는 공원, 유원지, 운동장등 각종 시설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69개의 공중변소(주민관리 12개소 포함)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대부분은 변두리 주택가나 어린이 놀이터에 위치하고 도심지인 종로, 중구에는 7개소밖에 없었다.

1983년 6.18「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문화시대」기사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치껏 백화점이나 다방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공중변소가 거의 없는 현실때

문으로 공중변소의 부족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ii) 수세식 변소

수세식 변소에 관한 내용이 처음 나온것은, 1959년 7.22「공동시설의 변소 모두 수세식으로」의 기사에서였는데, 즉, 1959년 8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공공시설의 변소가 모두 수세식으로 고쳐진다는 것이었다.

1970년 1월1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된다. 여기서 종말처리장(終末處理場)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바다, 하천 또는 공유수면(公有水面)에 방류(放流)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예를 들면 청계천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다. 『건축법규 해설집 1989』

1973년 2월에 상수도 설비를 갖춘 지역의 20평이상의 건물에 수세식 변소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는데, 이의 목적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청소비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 1973년 당시 서울시내에 있는 일반변소는 약 오십만개로서 그 중 수세식 변소는 겨우 2%인 삼만 오천개로 추정되었다.

1983년 6.18「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시대」기사는, 우리나라 화장실중 얼마가 수세식으로 개조되었는지는 그에 대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으며, 도시의 고급빌딩과 일부주택의 화장실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농촌은 96%가, 군과 읍은 89%가 재래식(1981년 내무부 통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수세식을 바랄수 없고, 분노가 직접 보이지 않고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개량하는 수준의 개선이 급선무임을 보고하고 있었다.

1987년 5월1일부터 1988년 8월말 기한으로 수세식화장실 개량에 관한구정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량을 유도한 첫 시도라 할 수 있겠다.

iii) 변소의 위생문제

1922년 3.25「분통까지 급여」기사는, 항상 문

제를 일으키는 변소 청소와 쓰레기 운반의 근본적인 개량을 위하여 위생연구소를 설치하고 빈민에게 분노통을 무료로 분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22년 5.23「변소에 니탄소독」의 기사에서 경성부 위생계에서, 연료가 될뿐 아니라 살균 살충을 하며 냄새까지 없애주는 니탄을 변소 소독재료로 사용하고자 연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니탄이란, 일명 흑도탄 이라고도 하는데, 황해도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들에서 파다가 말려서 나무를 대신하는 연료로 사용했던 것이다.

1938년 1.13「생활개선사안」에서는 그 집의 양전한 것을 보자면, 문전과 부엌과 변소를 분후에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변소에 대한 개량을 생각하고 깨끗한 청소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변소의 위생적인 면에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1938년 6.22「변소냄새를 없애려면」기사에서는, 변소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될 수 있는 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소독을 할 것이며, 냄새를 막기위해 퍼내는 곳을 완전히 막아서 광선과 공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창은 열어두어야 하며, 무화과 나뭇잎이나 여름밀감 껍질, 또는 타고 남은 재를 이용해서 냄새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73년 3.12「불량변소 전체의 1할」기사에서는 서울시 보사당국이 실시한 시내변소의 종합 실태조사 결과, 수세식 불량변소가 전체변소수의 9.8%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한강으로 흘러들어 환경위생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79년도에 들어와서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하지않아 한강물의 오염도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정화조의 연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화조에 대해서는 불량변소로 간주하여 사용금지 또는 해당건물에 斷水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화조의 연 1회 청소는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1980년 7.24「주택정화조 제구실 못한

다」기사에서는, 환경보호협회가 생활오수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수세식 변소의 비율이 점차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불량 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화조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위반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사는 1983년까지도 계속 이어져, 1983년 6.18「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문화시대」에서는, 서울의 도심지에서도 불쾌한 화장실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곳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는 정화조를 불량품을 사용했거나, 시공을 잘못했거나, 정화조 없이 분뇨를 바로 하수도로 흘려보내는「누가리고 아웅」식의 화장실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IV. 결론

연구(I)에서는 오늘 날 심각해진 주거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주거환경문제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랐고, 주거환경공해가 거론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약 70년간의 주거환경문제의 변화추이를 고찰하였다. (한국 주거학회지 제2권 2호)

이의 계속 연구인 본 연구(연구II)에서는, 연구(I)에서 초보적 문제기에 속했던 1920년대-1940년대에 우리나라 주거환경문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분뇨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변소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1920년(창간호)-1990년 사이의 동아일보 기사중 분뇨및 변소 관련기사 185개로 이를 가지고 연도별 총 기사수및 기사단수의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시대별 기사내용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기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뇨 및 변소관련 기사는 1920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920년대에 평균5.3건, 1930년대에 평균8.8건으로, 분뇨및 변소관련 기사는 주로 1920년대-1930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1920년대-1930년대 사이에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분뇨를 둘러싼 이권다툼이나, 오물적체에 따른 분뇨의 청소문제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2) 연도별 기사단수의 변화추이는, 1920년대에는 1-2단 기사가 9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에는 1-2단기사가 47개(54%), 3-4단기사가 40개(46%)로 3-4단 기사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까지도 1-2단 기사가 중심이 되어 나타났으나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3-4단 기사가 많아지면서 5단 기사가 함께 나타났다.

3) 시대별 기사의 내용은 크게 분뇨와 변소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분뇨의 경우

i) 분뇨의 비료이용문제

분뇨의 비료이용 문제는 1920년대-1930년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935년에 회령지역의 분뇨공급이 읍 직영으로, 나남읍의 분뇨급취가 지명입찰제로 변경되는 등, 그 관리방식이 公的인 것에서 私的인 것으로 변경되면서 어느정도 원만하게 해결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ii) 분뇨 운반방법

1921년에 분뇨통을 감출 수 있는 큰 「궤」를 고안하던 단계에서, 1924년에는 「탱크」식 마차가, 1937년에는 분뇨의 지하수송이 계획되었고, 1961년에 서울시에 흡인식 분뇨차가 도입되었다.

iii) 분뇨 처리장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물처리장소의 문제는, 1920년대 주택가 부근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에서 시작하여 1988년 성산동 서부 분뇨처리장이 폐쇄되기에 이르는 등, 오늘 날 「지역 이기주의」의 대

표적 예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v)분뇨 수거경비

1930년대의 분뇨급취료를 둘러싼 일반부민과 당국간의 대립에서 시작하여 1935년 6월 분뇨급취 수수료가 징수, 1947년에는 서울시의 오물세가 개정되고, 1978년에는 분뇨 수거업무가 구청에서 다시 민간업자에게 이양되었다.

v)분뇨 청소문제

분뇨의 청소문제는, 1930년대에는 변소청소가 제대로 되지않아 오물의 적체에 따른 보건 위생 문제에서 시작하여 1940년대-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1986년 12월 31일로 오물청소법이 폐지되고, 폐기물 관리법이 공포되어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는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게 되었다.

②변소의 경우

i)공동변소

1924년 5월에 인천지역에 공동변소의 신설계획이 처음으로 세워진 이래,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공동변소의 신설 혹은 증설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공동변소의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ii)수세식 변소

1959년 8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공공시설의 변소를 모두 수세식으로 고칠 계획을 세웠으며, 그 후 1970년 1월1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있는 변소는 모두 수세식으로 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었다. 또, 1973년 2월에는 상하수도 설비를 갖춘 지역의 20평이상의 건물에

수세식 변소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1987년 5월1일부터 1988년 8월말 기한으로 수세식 화장실 개량에 관한구청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iii)변소의 위생문제

1920년대-1930년대에는 변소청소와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빈민에게 분뇨통의 무료제공 혹은 변소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한 제안을 하던 시기였다.

그 후 1970년대-1980년대에는 수세식 변소의 증가등, 시설면에서는 큰 발전이 있었으나, 불량 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새로이 발생하였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5, 1990), 인구 및 주택 census.
-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5), 한국통계연감.
- 3) 건축법규해설집, 세건사, 1989.
- 4) 동아일보, 1920년 창간호, 1990.
- 5) 박창근, 환경오염 용어해설, 서울:錄苑, 1983.
- 6) 신경주, 일간지를 통해 본 주거환경문제의 연구(I) -동아일보(1920년-1990년)기사 유형의 변천-
- 7) 윤호섭, 환경오염개론, 세건사, 1990.
- 8) 이재우, 농가주택, 건우사, 1986.
- 9) 임만택, 건축환경계획 보문당, 1991.